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0.(수) 06:00 < 5.10.(수) 석간 > 배포 2023. 5. 9.(화)

유럽연합(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

-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 2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업계·연구계 등 합동 대응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현안 대응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유럽연합(EU)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유럽연합(EU) 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유럽연합(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유럽연합(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유럽연합(EU)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 첫 기획 회의(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유럽연합(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 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 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 27일) 개최

** 유럽연합(EU) 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 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 6일), 배터리법안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 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 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유럽연합(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유럽연합(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 유럽연합(EU) 법안별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 >

구분	부담요인	기회요인
❶탄소국경조정제도	ㅇ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로 인한 행정·비용부담 발생	ㅇ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전환 가능
❷핵심원자재법	ㅇ중장기적으로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 가능	ㅇ유럽연합(EU)의 전략프로젝트 참여 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수혜 가능
❸탄소중립산업법	ㅇ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산업의 경쟁 심화 가능	ㅇ배터리, 풍력 등 기존 유럽연합(EU) 진출 업계의 투자 절차 간소화 가능
❹반도체법	ㅇ중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제조역량 강화에 따른 업계 경쟁 심화 가능	ㅇ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유럽연합(EU) 진출 기회 확대 가능성
❺자동차 CO2 배출기준	ㅇ`35년부터 유럽연합(EU)시장 내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ㅇ유럽연합(EU)시장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대응 가능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유럽연합(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유럽연합(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560)
		담당자	서기관	황승완	(044-203-56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 개요**

1 개요

○ **(목적)** EU의 신통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 **정부 입장 수립 및 민관 합동 대응** 추진

* `23.2.2 Kick-off 및 1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5.10일(水) 10:00~11:30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단장 : 통상차관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30여명

* (관계부처) 기재부·환경부·외교부, (민간) KOTRA, 대한상의, 무역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배터리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학회 등

○ **(논의안건) EU 통상현안 동향 및 대응방안**

- '23년 신규 제안된 법안(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 '23년 발효예정 법안(역외보조금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등
- 관계부처별 대응방안, 업계 건의사항, 연구기관 영향분석 등 종합토의

2 회의 진행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ㅇ 개회 및 인사말씀	단장
10:05~10:25	20′	ㅇ EU 통상현안 동향 및 대응방안 - 그간 법안별 입법동향 및 대응 현황 - 향후 정부의견서 제출 등 대응계획	산업부 발제
10:25~10:35	10′	ㅇ 최근 EU 통상이슈 브리핑	무역협회
10:35~11:25	50′	ㅇ 안건 논의 - 기관별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종합토의	참석자 전체
11:25~11:30	5′	ㅇ 마무리발언	단장